# ‘한반도 문제’ 정동영-박지원 엇박자

## “북미협상-남북관계 연계 잘못…우리가 주도”

## “미국과 보조 맞추지 않으면 현실적 진전 없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박지원 의원이 4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해법을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정 대표는 북미협상 및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박 의원은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 않으면 안 된다”고 견해를 달리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북미협상과 남북관계 개선 연계는 잘못된 것”이라며 “발을 맞추라는 얘기도 있지만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공간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역할은 없다. ‘병행’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내정 간섭적 요소가 있었다”며 “그때를 반면교사 삼아 남북관계가 결코 (북미협상과) 종속관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타까운 것은 미중무역전쟁 속에서 한반도 문제가 강대국 정치의 희생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강대국이 한반도 문제를 좌우할 수 없다는 줏대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의원은 정 대표와 입장차를 보였다. 그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등을 시작할 때는 북미관계가 꼬여있지 않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현재는 북미 간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주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우리가 미국과 어떠한 경우에도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진전될 수 없다”며 “정부가 한미동맹 틀에서 출발하고 미국 보조를 함께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 대표와 박 의원은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 80%가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비준 동의에 지체 없이 착수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가 초당적으로 뒷받침해준다면 평화정착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한 만큼 평화당이 비준 동의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 역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박지원, 민주평화당 제1 정책조정위원장 맡기로

### 원내대변인 최경환

민주평화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제1 정책조정위원장(정조위원장)으로 박지원 의원을 선임했다. 원내대변인은 최경환 최고위원이 맡는다.

최경환 신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5개 정조위원회를 4개로 바꾸고 각 정조위의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제1 정조위원장인 박지원 의원은 법제사법·외교통일·행정안전·국방을 맡는다.

제2 정조위원장은 박주현 수석대변인이 맡으며 기획재정·정무·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을 담당한다.

제3 정조위원장은 국토교통·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을 책임지며 김종회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제4 정조위원장은 장정숙 의원으로 복지·환경노동·여성가족·교육·문화체육관광을 맡는다.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용주 의원에서 최경환 최고위원으로 변경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오늘 인선을 하면서 최고위원, 전·현직, 다선 의원 등 당 사정을 감안해서 솔선수범해서 작은 당직이라도 앞서 맡아서 새로운 기풍을 만들자고 의견의치를 봤다”고 전했다.

그는 “박지원 의원께서도 제1정조위원장을 맡는 파격적인 인선이 있었고 흔쾌히 승락하셨다”고 밝혔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 안민석 “병역면제 폐지, 능사 아냐”…은퇴 후 재능기부 제안

## “대중예술인도 병역면제 허용해야…마일리지제도 악용소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팀 병역면제 논란과 관련해 “폐지가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군 복무 기간 공백이 선수 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 적절한, 시대 상황에 맞는 체육 특기자 병역 특례 방안이 마련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체육회장이 언급한 ‘마일리지제도’(대회 성적에 따라 점수를 주고 일정 점수를 넘으면 혜택 부여)에 대해서는 “군대를 안가기 위해서 마일리지를 적금하는 식으로 악용을 할 수가 있다”며 “군대를 안가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태극마크를 단다고 하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법 취지와는 많이 벗어나게 된다”고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은 일선 지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은퇴 후 재능 기부를 일정 기간 동안 하게 해서 군대 문제를 해소하자”고 했다. 그는 “손흥민 선수가 유럽 프로리그에서 열심히 뛰어 국위 선양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다음 학교 축구부나 유소년 클럽, 아니면 섬마을 가서라도 자기 재능을 가지고 지도를 하게 되면 국민과 선수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식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은퇴 후 대체복무를 운동선수에게만 주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사회자의 지적에 “대중예술인 같은 경우에도 (허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BTS) 같은 경우에 빌보드 차트 1위까지 해서 분명히 국가에 공헌을 했다”고 했다.

안 의원은 “폭을 넓히되 시대에 맞게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 방안을 사회적인 공론을 통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더 이상 병역 특례 제도가 로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제 입장은 분명하다. 국민 공론화를 통해서 개선돼야 될 시점이 된 것”이라고 했다.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 이해찬 “문재인 정부 포용적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 것”

###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돼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 “文 포용적 성장 모델, 국민소득 4만弗 시대 열리게 할 것”

이 대표는 이날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는 IMF가 올해 한국 국민소득을 3만2000달러로 예상한 것을 인용해 “3만 달러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쉽지 않다”며 “게다가 자칫 불평등이 심화되고 혁신역량이 부족해지면, 경제는 전반적 위기와 장기 침체에 빠져버리고 만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포용적 성장 모델과 한반도 평화경제 모델이 더해지면 “우리 현실에 맞고 독창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이 완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에는 정부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재정이 민생의 버팀목이 되고,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라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내년에 가장 많이 늘어난 예산이 일자리 예산”이라며 “늘어난 일자리 예산은 구조적, 경기적 요인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일자리 시장에 훈풍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도 강조했다. 그는 “변화는 국민의 삶 곳곳에 고통을 불러오지만 지금 상황을 방치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해결 방법은 사회적 대화뿐이다. 사회적 대타협만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 ◇ “촛불혁명 성공, 광범위한 사회적 협치 필요”

이 대표는 이날 촛불혁명 성공을 위한 여야 협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협치가 필요하다”며 “국회는 국민을 위한 협치를 최우선의 가치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포용적 성장시대에 필요한 것은 명령과 목표가 아닌 대화와 합의, 당사자 간 타협”이라며 “국가 목표는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우리 시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합의의 결과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며 “그동안 국회는 당 대표 간 협치가 실종된 상태였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앞으로 ‘5당 대표 회동’이 정례화된다면 국회는 국민을 위해 더 봉사하고 더 큰 희망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또 “11월에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도 가동된다”며 “여당과 야당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외교안보 문제에서도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민생경제 문제에는 동·서도, 좌·우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대표는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청을 높였다. 그는 “국회 비준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막을 역진 방지책이자 국민적 합의와 지지에 기반해 대북 협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